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신청사 착공식... 3개 기관 공사중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지난 31일 신청사 착공식을 갖는 등 공공기관들의 이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지난 31일 혁신도시 내 이전부지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이강후 국회의원 등 기관·단체장 및 지역주민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사 착공식을 가졌다.

이로써 원주로 이전하는 13개 공공기관 중 신청사 공사에 들어간 기관은 산림항공본부와 국립과학사연

구원을 포함해 모두 3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또 대한적십자사와 한국관광공사 등 5개 기관은 건축허가를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석탄공사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이종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은 이날 “우리 공단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에게 최상의 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훈병원과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이라며 “원주 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원주가 의료복지 사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표 경제부지사는 “원주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강원도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원주로 이전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과 가족들이 원주시민과 강원도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2013년 11월까지 혁신도시 내 4,919㎡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6,639㎡ 규모의 청사를 건립할 예정으로 총 116명의 임직원들이 근무하게 된다. 원주=이명우기자 woolee@

건설업 평균 일당 13만8천원

올해 하반기 건설업의 하루 평균 임금이 13만8,000원대로 조사됐다. 지난 31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업 117개 직종의 올 하반기 하루 평균 임금은 전반기보다 4.52% 오른 13만8,571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직종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일반공사 91개 직종은 전반기에 비해 4.33% 올랐으며 광전자 직종이 6.8%, 문화재 직종이 4.83%, 원자력 직종이 5.94% 등 각각 상승했다.

춘천시 발주 공사 지역인력 고용 기대한다

춘천시 관내 건설공사의 지역 기여도를 높이는 방안이 마련돼 주목된다. 춘천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시 근로자의 우선 고용과 비상식적인 임금체불 방지를 꾀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다. 시의회는 아예 이를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다. 도내에서는 처음 제정하는 일이라 더욱 시선이 간다.

시의회에 발의돼 있는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이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원도급업체가 지역 건설 근로자와 지역 건설 기계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한 점이다. 또한 100억 원 이상 공사에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게 했다. 이 조례를 통해 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와 원도급으로부터 하도급을 보호하는 실제적인 규정도 강화됐다. 원청자와 하청업체의 주종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실정이고 보면 이는 반드시 적용해야 할 사안이다. 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전용계좌를 통해 개인계좌로 직접 임금을 지급

하도록 했다. 여기에 공사 감독자가 근로자의 임금수령 여부를 팔히 확인하도록 했더니 실질적인 시행도 기대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조례에는 업체가 기성을 포함한 공사비 청구 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는다고 한다. 당연히 지역에 있는 업체의 것을 사용하게 하려는 의도다. 하도급업체의 보호에 관한 내용은 사실 관계법으로 정해야 할 사안이다. 이것이 안 되니 조례로라도 강제하려는 것이다. 업체가 시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면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현금으로 이를 지급하게 한다니 적절한 방안이라고 본다.

춘천시의회는 오는 4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조례가 올해 초 정부의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실무요령 지침 등을 토대로 입안됐더니 일단은 신뢰한다. 그렇더라도 기왕에 지역 업체와 애써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일인 만큼 빈틈이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처리하길 당부한다. 도내에서는 첫 사례여서 타 지자체들도 깊은 관심을 갖고 주시한다는 점을 재인식하기 바란다.